

《민간업체까지 동원하여 무장장비첨단화에 광분한다》

최근 남조선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무장장비개발과 관련한 계획들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이데일리》, 《뉴스1》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현계획》을 식의 확정전해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올해 국방연구개발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10.5% 늘어나고 핵심국방기술연구개발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된다고 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업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분품의 자체생산비율을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아시아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과 군주출업 《광개토태왕-3》호에 장착할 요격미사일, 반항공식별구역인의 비행물체를 감시, 식별할수 있는 다음세대 장거리레이더, 조선반도상공에 떠있는 인공지구위성과 우주물체를 추적, 감시할수 있는 첨단레이더장비 등을 자체로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보다 앞서 방위사업청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 경항공포함의 설계와 건조를 자체의 연구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은 전

하였다. 남조선당국과 군부가 첨단무장장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은 《국방개혁 2.0》 실현의 연장선이라고 한다. 올해 초 남조선언론 《뉴스1》, 《이데일리》 등은 남조선군부가 업무보고라는 명목으로 《전방위국방태세화합》, 《모든 안보위협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운운하며 《국방개혁 2.0》을 완수할것이라고 하면서 《무인체계전력화》를 통한 감시, 경보기능,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선제공격, 한미합동훈련, 미사일억제전력 및 공동미사일대우전략, 핵심전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김 광 역

2월초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도 《국방개혁 2.0》의 추진정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서술하면서 남조선군의 《독자적인 억제, 계를 위해 《전략적라격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중이고 관련핵심전력을 증가에 확보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남조선군부가 천문학적인 수의 예산을 낭진하며 하고 대기업은 물론 민간업체까지 끌어들이 무장장비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안보위협과 무관한 헛소리》, 《조선반도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질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광 역

검찰개혁에 여전히 반기를 드는 보수야당

남조선에서 적국화되고있는 검찰개혁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계속 반발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서울경제》, 《경향신문》 등은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중간급인사를 단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설립의 립법을 추진하고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설립은 간단히 말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말한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야에 폐지하고 법무부산하에 《중수청》을 설립하는것이라고 한다. 《중수청》설치와 관련하여 이전 법무부 장관은 《70년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당국과 여당이 추진하고있는 《중수청》설립법안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으로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것인가》고 반발하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비리를 은폐하려 한다.》 《중수청설립법률》을 단호히 맞설것》이라고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고있다고 하였다. 부서의 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한다.》,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세계일보》는 검찰내부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중수청》설치문제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사안인데다 《식물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기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직과 영향력이 소그라들수밖에 없다. 검찰이 립장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격화되었던 여론과 검찰, 여야의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중수청》설립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검찰적폐개혁을 부추기며 당국과 여당을 공격하고 당면한 보충선거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열어보려 한다고 분석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권 일

는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사안인데다 《식물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기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직과 영향력이 소그라들수밖에 없다. 검찰이 립장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격화되었던 여론과 검찰, 여야의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중수청》설립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검찰적폐개혁을 부추기며 당국과 여당을 공격하고 당면한 보충선거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열어보려 한다고 분석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권 일

위기의식의 발로

남조선언론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등은 보수세력내부에서 야권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속에 그들의 시선은 보충선거이후를 바라보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정계개편으로 새로운 야권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보

충선거이후에도 기대를 걸어볼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인물은 새로운 개편이 있지 않고는 야권후보가 제대로 설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 보수가 모두 모이는 《자유주의상식연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여기에 《국민의 당》 대표를

권력파괴야망이 비친 정계개편론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속에서 그 무슨 정계개편론이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상식연합》, 《범우파연합》, 《서울시립정부가》 등이 그러했것들이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정계개편인가, 주도권쟁탈인가?

남조선언론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등은 서울시장보충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야권인사들이 정계개편문제를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다. 《국민의힘》의 어느 한 인물은 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진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서울시장보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커지고있다고 전하였다. 더불어민주당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다 보수야권단일화를 둘러싼 관심이 《국민의 당》 대표에게 쏠리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후보와 《국민의 당》 대표가 1, 2위이고 《국민의힘》후보들

비롯한 《3지대》인물들도 보충선거에서 보수단일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범우파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보수내부에서 정계개편투쟁이 동시다발로 분출되고있는것은 야권후보단일화로도 보충선거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의구심, 기존권관으로는 참패할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은 3~5위권을 차지했던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경선토론회에 대한 시민, 언론들의 관심도에서도 《국민의힘》은 《3지대》에 밀렸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보충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지금 《국민의힘》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있다고 언론은 전하였다.

당이 정비되어 《국민의 당》을 포함한 현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가 될 때 야당권이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물들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체제가 불안한 품고있던 세력들이 대렬정당의 명목으로 당내 주도권쟁탈을 위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고 분석하였다. 본사기자 안 권 일

물가급등으로 인한 주민생활난이 더 커질것이라는 우려 확산

얼마전 남조선언론들은 최근 물가상승세가례 사물지수상승으로 빵, 축적법 등 주요가공식품값이 줄줄이 오름데다 원자재가격도 가파로운 상승세를 보이고있어 주민생활에 충격이 클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전망이 심상치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이 한달전보다 0.2% 오른 2%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8월(2%)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와 비교

한 1년뒤의 물가수준전망지수(144)도 2% 상승해 2019년 5월(145)이후 1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품목은 농축수산물(52.4%), 집세(40.1%), 공공요금(31%)순으로 나타났다.》 언론들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

황에서 생활물가마저 가계를 위협하고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추이를 보면 공업생산품 가격과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기요금과 연료비등이 상승함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안 권 일



《주도권쟁탈전》, 《전국권력파괴야망》, 《검찰은 무슨...》, 《갈이 가야해!!!》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 일본 각지에서 전개 ▷

일본당국의 재일조선학교 차별책동에 맞서 민족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이 일본 각지에서 계속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킹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야마구찌현네트워킹의 공동주최로 일본 야마구찌현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야마구찌현본부 위원장 박철, 야마구찌조선중급학교 교장 오영철과 현재 재일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을 규탄하며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항의행동을 비롯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정부가 민족교육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도록 하는것이 투쟁의 핵심이며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과거청산으로 이어지는 투쟁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위해, 자라나는 후대들의 교육권리를 위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투쟁참가자들은 야마구찌조선중급학교에 대한

보조금지불제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일본당국과 지방자치체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규탄하며 거리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후쿠오카현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고통학교지원제도적용실현을 요구하는 후쿠오카현민집회가 있었다. 규슈조선중급학교 학생들과 교원들, 보호자들을 비롯한 동포들,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시민단체 성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일본정부의 민족교

육차별정책은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 학생들과 나 어린 유치반 아이들을 배제한것도 모자라 전염병사태에 대처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까지 조선학생들을 제외하였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이것은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들의 비열한 행위라고 하면서 당국의 차별행위에 맞서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이어 규슈지방지원문제관

런 변호단 변호사들의 연대발언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모든 재판소가 국가에 의한 조선학교차별정책을 묵인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난하였다. 고통학교지원제도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의 부당성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학교와 유치반들의 지원제도적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는 호소문이 낭독되었다. 안 해 심

《주도권쟁탈전》, 《전국권력파괴야망》, 《검찰은 무슨...》, 《갈이 가야해!!!》, 《민족교육권리옹호를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일본 각지에서 전개》, 《증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죽음의 고역장 — 《대본영지하실》 공사장》, 《죽음을 위한 투쟁》, 《독도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임을 보여주는 옛 지도》

독도를 한사코 분쟁의 초점으로, 재침의 도화선으로 하여 과거의 령토쟁탈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남의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억지책동을 고아대는 일본의 망동을 보면 령토야욕은 버릴수 없는 섬나라속속 특유의 유전인자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정객들과 구유세력이 시구왕의 지령이들처럼 시마네현에 모여들어 남의것을 제것이라고 너드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신성불가침의 독도가 일본인의것으로 될리 만무한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도 일본의 과격치한 독도강탈책동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동북아역사재단은 립장문을 내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이다.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울



독도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임을 보여주는 옛 지도 (1530년에 제작된 《8도총도》)

증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죽음의 고역장 — 《대본영지하실》 공사장

일본 나가노시의 마쓰시로는 옛날부터 온천으로 이름난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서는 지울수 없는 원한이 뼈에 사무친 땅이다.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저들의 패배가 결정되어가던 1944년에 일제는 《최후결전》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곳에 지하실을 파고 《대본영》을 옮기기로 하였다. 《대본영》이란 일제가 침략전쟁을 벌리면서 왜양밀에 두었던 최고중수부이다. 일제는 이 공사에서 당시의 금액으로 2억부의 막대한 자금과 함께 수많은 노력을 동원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조선사람들이었다. 공사계획을 세울 때에 벌써 그 인적자원을 조선사람들로 보냈던것이다. 당시 일본수상 도조 히데키는 공사의 설계가 완성되었

다는 보고를 받아 조선총독에게 조선사람들을 징발하여 마쓰시로에 긴급히 보내라는 비밀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일제의 경찰, 헌병, 군대가 총동원되어 《인간사냥》에 떨쳐나갔고 조선의 수많은 청년들이 현재 탄을 넣어 마쓰시로비밀공사장에 끌려갔다. 일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와테현발전소 건설장의 1600여명 조선인노동자들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철도공사장과 군수공장건설에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사람들도 이곳으로 끌여왔다. 공사장에서 조선인노동자들은 짐승우리만도 못한 《합바》의 행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고 책은 《포도밭》 한송이도 주린 창자를 달래며 마수와 같이 고통을 강요당해야 했다. 헌병들, 특별고동계의 경찰들이 돌아치고 무장한 감시병들이 노동자들을 감시하

고 위협하던 공사장은 말그대로 처참없는 하나의 큰 감옥이었다. 조선사람들은 새벽 4시면 벌써 공사장에 내몰렸다. 그들은 신세부터 온종일 체찍속에 고통이 시달리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다리를 끌며 《합바》로 돌아서곤 하였다. 매일과 같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어갔다. 죽음의 고역장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제는 탈출하는 조선사람들을 붙잡으면 가차없이 총살을 하거나 수백메터나 되는 절벽에서부터 뛰어내려 학살하였다. 또한 조선인노동자들을 죄함안에 던져넣고 거기에 쇠칼과 세면트흔합물을 쏟아부어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하였다. 《대본영지하실공사장》에서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

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시체가 실려나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일제도 조선사람들의 무덤이 늘어나는것이 두려워 평무덤을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멀리 실어다가 없애버렸다. 마쓰시로 《대본영지하실공사장》은 말그대로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주리막공포, 불안과 죽음의 인간생지옥》이었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잔인한 학살민행에 대해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일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은 형제교리를 잃고있었는데 그들은 심장이나 감독의 눈에 띄우지 않기 위하여 옷에 풀탄을 하고있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십장 높은 폭탄이채로 마구 때려 반죽음을 시키곤 하였다. 시체는 가마안에서 처넣어서 어면것은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못이나 강물에 처넣기도 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유골은 행처도 모른다.》 길이가 약 13km, 총면적은 43km나 되는 《대본영지하실》공사가 아무런 기계수단도 없이 순 인력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여기서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얼마나 혹사하고 어떻게 회생시켰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왜왕의 침실공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동원되었던 180여명의 조선인노동자들은 단 한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비밀보장》이라는 구실명에 수많은 사람들을 극비리에 집단학살하였다. 마쓰시로 《대본영지하실공사장》은 일제에게는 《피난처》였지만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죽음의 마굴, 인간생지옥이었다. 옥 철 응